

언론에 보도된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오로지 '폐지'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송감호소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당론으로 사회보호법폐지를 결정하고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청송감호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다음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뒤질 수 없다는 듯이 나팔수를 내세워 사회보호법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법무부의 대책은 책상머리에서만

더욱 기가 찬 것은 3월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태도다. 어찌하여 이제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상머리에 앉아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피감호자들은 단식으로 절규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남이 볼까 숨어서 피눈물을 삼켰다. 근래 들어 피감호자들은 여섯 차례나 단식을 반복하며, 수 천 통의 진정서와 편지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하기 시작한 세월이 만 2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말인가.

보호감호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던 지난 2003년 9월 이후 3개월 동안 법무부는 약 700명 가까운 피감호자들을 가출소시켰다. 그래도 사회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가출소자들은 차떼기로 기업을 털어먹지도 않았고, 국민을 구경꾼 삼아 주먹질을 일삼지도 않았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차라리 피감호자들을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되는 버리지 같은 존재라고 말하라. 법무부 보호국의 요직을 두루 꿰차고 들어앉아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보호감호를 폐지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라. 그것은 비겁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다.

나는 지난 11일 공대위 활동가님들과 청송보호감호소를 찾았다. 피감호자들은 이제 분노할 힘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이를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제야말로 저 야바위꾼들의 말장난이나 언론의 나팔에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인 싸움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은 나에게나 피감호자들에게나 또 다른 시각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하다. 17대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전열을 재정비하자는 내 스스로의 다짐까지도 나는 경계하고자 한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조석영씨는 사회보호법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 대표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8일 (목)

제 25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경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2.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3. <현장스캐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의 자유'에 빗대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루소가 비판했던 '노예의 자유'는 대의제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땅의 우리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굴레이다.

대의제는 말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그것은 오직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권의 행사가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령'을 반복하는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언제나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적 위임 제도'의 구상을 오늘의 제도로 자리잡게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권이 인민의 것이라면, 인민의 이익을 배반한 수탁자(의원)를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로 등극한 부르주아지들이 정치적 권리를 형식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사이, 민중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바를레(J. F. Va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파리코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들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 주체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까지 국회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예시키는 데 길들여져 온 우리를 '익숙한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

국민투표권이나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

된 경향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의 인권 수준이 향상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주지사 소환 선거를 통해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주지사로 변신시킨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물론이고, 최근 부패한 야당과 우익세력들이 연합, 국민소환운동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처럼 내던지고 핵폐기장 부지 신청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희망'을 건설하고 있는 부안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매는 없다.

<기사 처음으로>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배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유인물, 제창되는 구호 등이 15일까지 진행됐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다르지 않은 집회라는 것.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태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상케 하는 악습이 되어버렸다"며 "경찰의 오독을 부르는 현행 집시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회의 원천적인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며 또 경찰서장의 자의로 허·불허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7일 저녁 광화문 앞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가운데 범국민행동은 예정대로 '탄핵무효와 부패청산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기사 처음으로>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몸짓이 끈기와 투지로 12년을 견뎌냈다. 그 작은 몸짓은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로 17일, 600회를 맞이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할머니들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600회 수요시위는 서울은 물론 동경, 마닐라, 뉴욕, 베를린 등 8개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3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함께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아래 정대

협) 윤미향 사무총장은 "수요시위가 지속되었던 것은 할머니들의 힘"이라고 단언하며 "그동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처음 수요시위에 왔었고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이 된 이거임 씨는 "수요시위는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온 평화회 회원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경희대 학생들은 '평화의 나무'를 전달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염원하는 600개의 만장이 행사장 하늘에서 필러이며 수요시위를 장식했다.

이제 일본의 범죄행위를 기억하는 일이 할머니들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 증언자가 사라진 자리,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힘은 피해자의 체험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관이나 자료관, 박물관 등이 필요하다. 정대협 신혜수 상임대표는 "할머니 증언을 삶으로 남겨야 한다"며 "역사교육의 장으로 '명예와 인권의 전당'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참여를 요구한다"고 부탁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9일 (금)
제 2535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2. '투쟁은 계속된다'
 3.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데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 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소득 불평등도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CD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무에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민간위탁 용역노동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지침이 비정규직화 주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청소 업무에서부터 직업상담, 우편배달, 연구원 등 기관의 핵심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98년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이 광범위하게 관철된 점을 들었다.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정원의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새로운 일자리의 비정규직 충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킨 민간위탁 확대 지침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철저하게 비정규직화를 꾀해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대수술해야

국가인권위 데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은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대수술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연구팀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하한선으로 공표하고 적용을 확대할 것 △상시고용 비정규직은 업무에 상관 없이 정규직화할 것 △비정규 고용의 합리적 사유 명시 △무분별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부도수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가 어떤 정책 권고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투쟁은 계속된다"**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째 ... 새로운 다짐**

정부의 단속·추방에 저항하며 30여일 단식을 벌여온 이주노동자들이 18일 단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으로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카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없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찾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까리만 씨는 "투쟁이 이 단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강하게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을 접지만 정부의 단속·추방에 대한 저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출국거부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대표 사멸 타파 씨를 표적 연행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으로 저항해왔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식을 벌인 깨비, 굽타, 샤말 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지난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보호소 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지속적인 치료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은 정부의 실패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폭로하였고, 또 이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저녁 농성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강요되는 이주노동을 파헤친 '세계의 난민들'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기록한 'which is illegal?' 등 영화 두편이 상영되었다.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민수(네팔) 씨는 영화를 보고 "또 다른 힘이 생긴다"며 "이 일은 꼭 해야 한다. 한번 더 내 자신을 깨워라. 일어나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유진 씨는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보게 돼서 더 감동적인 것 같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130여 명의 관객들이 농성장을 가득 메워 이주노동자 투쟁에 힘을 보탰다.

<기사 처음으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5일 6주간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항목 하에 백여 개 주제와 수십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처럼 작년에 처음 등장한 이슈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다루어온 내용들이다.

최대의 관심, 테러 대 반테러

테러와 반테러(counter-terrorism) 주제는 올해도 정부, 유엔 그리고 NGO 모두의 최대 관심사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9.1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던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적 이상이 현실정치에 의해 흔들리면서 인권위의 위상과 권위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국제엠네스티는 개막 전 성명서에서 "인권위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테러리즘을 둘러싸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인권규범의 틀 속에서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는 NGO와의 공방전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단연 중국인권결의안이다.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적 지지 또는 목인이 필요했던 미국은 수년간 계속해오던 결의안을 작년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다시 중국 결의안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두 코끼리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중국 결의안이 예전처럼 한 두 표 차이로 기각될지 조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나라별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버마, 쿠바, 부룬디,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북한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작년에 표결에서 부결된 짐바브웨, 수단, 체첸의 결의안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국적 기업의 법적 규제 다른 보고서 채택 여부 쟁점

한편,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발전권, 극심한 빈곤, 식량권, 주거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청원(communication)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채택에 관한 논의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올해 최대 관심사는 초국적 기업(TNC) 문제이다.

유엔 인권위 산하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권 소위원회는 작년 8월 3년간 조사연구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가 이번 회기에서 보고서 내용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과거 유엔의 지구협약(global compact)이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강조했다면 이 문서는 법적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정부의 반대가 강하지만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지지하고 있어 이 보고서의 채택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 영역의 최대 관심사는 성적지향과 관련된 인권문제로 보인다. 이른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은 지난해 브라질 정부에 의해 상정되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올해로 연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이슬람 국가와 바티칸은 문화·종교적 가치와의 충돌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인권교육은 적지 않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로 끝나는 제1차 인권교육 10년에 이어 제2차 인권교육 10년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결의안 채택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주도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는 문제가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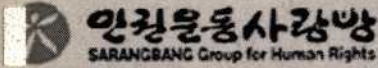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한은 작년 결의안의 이행은커녕 정당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입장간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 60차 유엔 인권위에 제출된 정부와 NGO 발언문은 www.unchr.info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0일 (토)

제 25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2.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 3.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미국이 침략군으로서 이라크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년. 이라크 어디에도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향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불식하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 테러를 불러왔고, 전세계로 확산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점령군으로 동참을 약속했던 나라들마저 미국을 등지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미국과 침략전쟁에 동참한 나라들을 더 압박할 뿐이다.

최근 스페인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전, 파병반대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스페인 내 90%에 이르는 전쟁 및 파병반대의 요구를 받아 안은 스페인의 새 총리는 6월까지 이라크에서 스페인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페인만이 아니다. 다국적군으로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온두라스, 폴란드 등도 자국 군대의 철군을 공식 발표하거나 조기철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데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의 비참한 현실도, 미국과 점령군의 새빨간 거짓말도,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도 도무지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평화재건'은 미국과 함께 내딛는 점령군의 발걸음으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점령군'의 지위로 어떻게 평화를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원한다면, 당장 추가파병 동의안을 철회하고 이라크 내에서 한국군을 철수하라! 만약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민중과 더 나아가 인류의 양심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계약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

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 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나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0조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헌법 상 기본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자유로운 집회 시간을 결정할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다"며, "야간집회의 원칙적 합법화 속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후 주취측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 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고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파르기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까지 제출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중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개악 과정에서 국회는 그 혼란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비준안도 여야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법률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다. 바야흐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은 헌신짝처럼 던져지고, 국민은 무기력한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들은 국회밖에 모여 허탈하게 집회나 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면 서 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국민발의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발의제가 도입되어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통과된 법안이나 정책도 국민투표에 붙여져 결정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발의제에서는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의원만이 누리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2년 개정헌법에 국민발의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의를 인정했던 헌법이 69년 개정되면서 국민발의는 지금까지 잊혀진 권리가 되고 말았다.

스위스 국민발의제

앞서 국민소환제를 다룬 글에서 근대시민혁명 초기의 직접민주제의 구상에 대해 살펴 보았기 때문에 그 연원을 여기서는 굳이 재론하지 않는다. 다만, 대의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각국은 근대시민혁명과정에서 폐기하였던 직접민주제를 하나하나 찾아 보완해갔다.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의제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1874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결정 국민투표제를 도입했고, 1891년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발의제, 1921년 특정 조약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받도록하는 국민발의제를 도입했다. 스위스의 법률결정 국민투표제의 경우는 유권자 5만 명(전체 유권자의 1.1%)이 국민투표를 발의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유권자 10만 명(전체 유권자의 2.2%)의 발의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광범한 국민발의권이 인정됨으로 재정에 관한 국민투표, 법률안의 발안도 적극 도입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스위스의 권력은 철도회사 사장, 은행가 등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장악했고, 권력은 이들 특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런 권력 집중현상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1867~69년 쾰리히 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되어,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 여파는 다른 주에도 미쳐 스위스 연방에 직접민주제가 안착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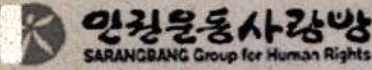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자

국민발의제는 토론이나 서명 등의 정치행위를 동반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소양을 쌓게 된다. 국민발의 과정에서 그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 제기하는 법안의 전문가가 된다. 물론 국민발의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적인 결정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례다. 그렇지만 국민소환권과 함께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쟁긴다면 오늘날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탄핵국면은 우리가 군사독재정권 이래 빼앗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3일 (화)

제 25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2.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3.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서울 순례가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가 준비한 "차별 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아래 대행진)이 목동전화국을 출발로 시작했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서울 25개 구를 도보로 순례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행진의 출발점이 된 목동전화국은 2001년 3월 29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점거를 벌였던 곳이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순례단장을 맡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번 순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행진에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순례 첫 날,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전국학습지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등 다양한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선 것이다. 기아자동차노조 소하리지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월차까지 내면서 이번 순례에 참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비정규직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천지산업노조 이규석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깊이 있는 연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등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전체 노동자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부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알려내고,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규직 투쟁도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탄핵'에 모든 문제가 잠식돼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현실에서 "총선의 진정한 쟁점은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며 시작한 이들의 순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 처음으로>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다 지난 5일 1차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 강 씨를 면회한 전해투 변의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판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변의성 조직국장 역시 "강 씨는 단식 후 내시경 검사를 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포승줄과 수갑을 한 채 검사 받을 것을 강요해 강 씨가 거부했다"며 구치소 측의 무리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구치소 장모 교도관은 강 씨가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교도관의 구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 고충처리반 이기석 교위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장에는 장 교도관 외 다른 한 명의 직원이 더 있었는데, 강 씨가 책으로 장 교도관의 머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은 강 씨를 면회하고 난 후 "강 씨는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PET병을 던졌을 뿐이고, 사건 이후 구치소 측이 책을 가져가더니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강 씨를 비롯 구치소 내 구타 주장과 관련해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 교도관에 대해 수용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말해 강씨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무지'와의 싸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여자여서 차별하고, 못 산다고 차별하고,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하고, 다리를 절름거리다고 차별하고, 늙었다고 차별하고, 어리다고 차별하고, 못 생겨서 차별하고, 질병이 있다고 차별하고, 대학졸업장이 없다고 차별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차별하고, 엄마가 없다고 차별하고, 이혼을 했다고 차별한다.

그리고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혐오스럽다', '미친 것 같다', '재수 없다', '더럽다', '웃긴다' 등등의 말을 내뱉는다.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아내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절교를 선언한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서 타인을 사랑할 자격을 뺏는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아이를 입양해 키울 권리를 주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편견'과 '무지'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사람인양 신기해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는 "천룡을 어겼다"고 말한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관계를 통해 주로 전염되건만, 동성애자가 감염원이라고 뒤집어씌운다.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성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이러한 '편견'과 '무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찍히면 죽는'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게, 그리고 용감하게 활동해왔다. 동성애자 상담과 지지그룹을 만들고,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영화제와 문화축제를 열고, 매체를 만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 실무자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을 하고, 차별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싸움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사회 동성애자의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러한 질문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가"라는 말로 바꾸어볼 수 있다. 10년 전에 비해 동성애자의 현실은 분명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때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깊고 강고해서,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 동성애자 인권의 현주소일 것이다. 만약 "인정해 줄 테니 조용히 살아라"거나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편견'과 '무지'를 깨는 것은 '무관심'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관심과 배움,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조이어울 님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1. 야간집회는 원천금지? 누구 맘대로!

단백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광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 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범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범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첼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가족, 미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반전운동 대열참여(3.15)/ 온두라스, 이라크전 참여 군대 370명 6월말까지 철수 밝혀(3.16)/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 잇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3.16)/ 미국의 이라크 침공 1년, 전세계 '이라크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 촉구' 시위 ... 서울을 비롯해 300개 도시에서 국제 반전시위 열려(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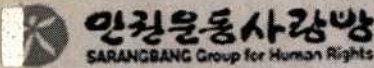
3. 기타

다산인권센터 등 8개 인권단체,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사건 관련 법무부에 진상규명 및 교도관들 엄중 문책 촉구(3.16)/ 제1회 국제노점상연합대회 서울 개최, 28개국 노점상 대표 참가(3.16~3.19)/ 검찰, 'KAL858기 사건 정보 공개 못하겠다'며 항소...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가져(3.16)/ 600번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서울을 비롯해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열려(3.17)/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발표(3.18)/ 노동부, 18살 이하 청소년 야간 노동 규제 완화 검토 밝혀(3.18)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4일 (수)

제 25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2. '그들만의 땅'
3.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4.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콩기 체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

홍 차석대사의 발언 속에 미등록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강제추방이나 가스총과 수갑이 동원되는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와 같은 실제상황은 속 빠졌다. 도리어 이러한 강제추방을 부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주기 위한 조치로 화려하게 치장됐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인 노동기한도 3년만 주며, 그나마도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해 노동3권 행사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이른바 '노예노동 허가제'라는 '보충설명'이 선포된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이주자는 모조리 추방시키는 제도를 어떻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차석대사의 '용감한' 발언은 "의무교육 연령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금연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는 학교장 제량에 따른 '정강생'의 자격만이 주어질 뿐이며 따라서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제한되고 있다"며 이 발언을 일축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 의 말은 다르다. 서 국장은 "지난해 10월 26일 표적 연행된 이주노동자 두 명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운 채로 물을 먹이고, 집단 폭행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두 명의 이주노동자는 인권위 결정 직후 기각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당했다.

실제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단속 과정이나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 중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금연 대표는 "여수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수용된 샬매 타파 씨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구제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되고있다"고 말한다.

결국 '왜곡 광고' 일색의 이번 한국정부 발언은 현재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정작 '용기'를 내야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한편,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오는 6, 7일 열리는 소수자 의제 관련 회의에서 강제추방 과정 및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고용허가제도의 반인권성 등을 폭로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유지 절반을 상위 5% 가구가 독점하고 있고, 하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2.6%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 가구가 전체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상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97.4%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절반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를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는 3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607로 소득 불평등의 0.306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93년 종합토지세 납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완화하면서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됐고 지금껏 토지문제 불평등에 대해 대안이나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의 사유화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89년 택지의 일정 한도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는 '택지소유상한제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6차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다가 재산권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으로 1999년 그 명을 다하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토지소유구조 아래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서민들은 비닐하우스와 쪽방에서 살고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한편 철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은 투기수요에 따른 지가 상승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이 불로소득은 토지에 재투자되어 토지소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는 때에 따라 '억울한 누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영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형소법 개정에서 '보조인 범위의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현재 형소법 29조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에서 보조인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장애인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인의 범위에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운 사람에게 보조인의 역할을 맡겼을 때 형소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이해하며 참을성과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인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피의자에게 보조인 제도 의무고지 및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문서를 접자나 플로피디스크(음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법무부 혹은 대법원 산하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장애로 인해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차별을 감시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토론회에서 제안, 논의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검토한 후,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고, 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정책목표와 과제를 담은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미 '형사법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처음으로>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강철민 씨는 "베트남전의 후유증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 빨리 파병안이 철회되고 전쟁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4박5일 휴가의 마지막 날인 2003년 11월 21일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며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강씨는 7일간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한 후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헌병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5일 (목)

제 25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정상가족'은 없다
2.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3.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4. 제8회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최근 출산을 하라, 이혼 및 독신가구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가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상상담소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안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속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가족형태를 특권화 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가족기본법 8조1항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애적 결합, 동거가 아닌 결혼, 자녀 출산을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로 보는 것으로 동성애가구, 독신가구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은 "혼인제도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한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이 중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가치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을 염두에 둔 체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번 토론회는 가족중심주의를 넘어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 처음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22일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저항단체 중 하나인 '하마스'의 창시자이자 지도자인 세이크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암살되었다. 당일 새벽 야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브라 지역 알-무자마아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스라엘 군 헬기가 쏜 미사일 3발을 맞고 사망했다. 이로 인해 야신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하마스는 "우리는 반드시 샤론의 목을 자를 것"이라 주장하며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팔레스타인의 각 단체들 역시 일제히 이스라엘의 샤론 정부를 규탄하며 '성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22일 가자지구에서는 20여 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모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시위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 아랍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는 야신의 장례식 중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3명의 시위대와 1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숨졌다고 WSWS(세계사회주의자 웹사이트)는 전했다.

이스라엘 샤론 총리의 '도발'에 대해 아랍권 국가들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국가적 테러"라고 비난하였고,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이스라엘 비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은 "양쪽 모두 자제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암살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팔레스타인해방전선의 아흐메드 지브릴은 "시오니스트들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후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하마스 역시 "미국이 이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복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2일 국제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은 정당한 근거나 방어권조차 제공하지 않고 초법적인 집행에 의지해왔다. 지난 3년 동안 2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저격 당해왔는데, 그런 공격들은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 이러한 살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제 평화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을 조준하여 '저격 살인'을 한다는 의혹과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번 시위의 과정에서도 한 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저격당했고, 이전에도 팔레스타인 기자는 저격 살인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이스라엘 군이 고의적으로 국제 평화활동가들을 '노린다'는 진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어 왔고, 이제는 총구가 국제 평화활동가와 기자들에게까지 겨냥되고 있다. 급기야 팔레스타인 저항의 '정신적 지도자'까지 암살 당한 상황에서 '중동 평화'는 더욱 요원한 길처럼 보인다.

<기사 처음으로>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용역업체 사장이 노조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23일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이덕순 지부장은 23일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안양시 시의원)과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는 면담을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찬배 위원장과 이덕순 지부장이 회의장소를 떠나려 하자, 권 사장이 길을 막아선 것. 이날 권 사장의 폭행으로 이찬배 위원장과 이덕순 지부장은 현재 서울녹색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앞에서 프로종합관리(주) 재계약 철회와 권 사장의 안양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 나온 이찬배 위원장은 "심장이 떨리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 사장이 몸을 밀치며 우리를 막아섰고 도망치는 우리를 쫓아와 폭행을 가하고 수모를 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프로종합관리(주)는 3년간 지하철 전동차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던 용역업체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계약기간 동안 19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23일 면담은 집회 개최 직전에 권 사장이 노조의 면담 요구에 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덕순 지부장은 "권 사장은 협상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면담에 응했던 것인데, 면담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프로종합관리의 재계약을 용인할 수 없으며, 잘못된 재계약에 대해 지하철공사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며 업체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지하철노동조합, 민주노총 등과 연대하여 제계약 철회, 서울지하철공사
사의 직접고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여나갈 예
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8회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작품의 길이, 장르, 매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200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
작된 작품 중 인권을 주제로 한 것이 공모 대상입니다.

심사용 VHS tape와 참가 신청서 1부 (www.sarangbang.or.kr/hrfilm/2004hrfilm에
서 다운로드),
영화스틸 3매 이상을 준비하여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
다. 접수된 작품은 인권영화제 선정위원들의 시사를 거치며, 상영작으로 확정되면 개
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제8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이 됩니다. 문의: 02-
741-536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인 | 인본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6일 (금)
제 2540 호
발행처 : 인본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3.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4.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동자, 고발 예정
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중인 노동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10만여 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노동부 안이 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우선 정규직화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먼저 상시 위탁 집배원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또한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은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는 '정년제'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 계약갱신제'가 실시된다. 한시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60% 가량인 현 평균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정년제와 자동계약제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03.12)만 보더라도 "업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업무에 의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요건을 △정규직의 결원으로 인한 일시 대체 △일시적, 계절적 사업 △일시적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최소한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년제와 자동계약제가 일정 정도 고용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 '비정규직'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급식보조비, 가계지원비, 휴가비, 주택 및 의료비 지원 등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부 안은 노동계의 요구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완전 전환'이 아니라 '무늬만 정규직'인 '정규직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평균급여 수준을 현 60%에서 그 이상 일정 정도 높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직접고용 부분에서 제한적인 신분보장이라는 눈가림 속에 간접고용이 급증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부 정규직화되면서 늘어난 비용을 정부는 결국 간접고용의 확대를 통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해결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외주나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보다 악화된 '노예 노동'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3,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혜나 은혜의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 인권'의 대명사였으며, 수인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 '침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인이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에 목말랐던 수인에게 다소 해갈이 될 듯 하다.

하지만 감옥판례 자료집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자료를 모은 데 한계가 있다보니 판례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 간간히 보이고, 각 판례와 결정문을 분석하지 못한 채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으로 그쳤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되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자료집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감옥인권 시리즈 1편 『감옥법령자료집』의 경우, 송금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인의 현실을 감안해 대부분 '우표' 등의 다른 교환수단으로 책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외부송금'을 의례적으로 차단하는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자료집은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이 판례자료집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외부송금 제재'의 장벽을 허무는 투쟁이 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영등포 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치소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는 수용자 폭행인정 및 공개사과, 폭력 교도관 처벌, 향후 폭행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전해투 변의성 조직국장은 "구치소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고로 수용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모 씨를 비롯 전해투 회원 강모 씨 등은 1월부터 교도관의 폭행을 주장해왔고, 강모 씨는 폭행 근절과 구치소 측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단식에 다시 돌입했다.<본지 3월 23일자 참조>

집회 이후 면담에서 조영호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많은 가혹행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조 소장은 "구치소내 폭행 존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몇 명을 접견한 결과 일관되게 정모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킁봉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며 "허위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소장은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라며 구치소에서 일고 있는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해결을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구치소는 지난 22일 단식중인 강모 씨를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구로성심병원 에 강제 이송시켰다. 구치소장은 "단식으로 인해 의료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어 강씨의 단식을 외부로부터 격리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활동가는 "단식으로 인한 문제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할 것이 부담스러워 취한 조치 같다"며 "단식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사대수습 의지가 없는 책임방기"라고 꼬집었다.

인권단체들의 요구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로 선전전을 실시하고 오전에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회사측, '폭행 사실 없다' 주장...노조간부, 고발 예정

23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노조 여성간부의 주장에 대해 회사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04년 3월 24일자>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 측은 "민주노총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이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대화의 계속을 요구하는 권용준 사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자그마한 실랑이에 불과하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폭력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서 말하는 추격전은 이찬배 위원장이 먼저 권사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달아나서 권 사장이 이를 쫓아가 잡는 짧은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연맹 위원장은 "길을 막아서는 권 사장을 피해 건물 6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듯이 빠져 나왔다"며 회사측의 주장에 어이 없어 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단에서 쫓기면서 공포감마저 느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구독료 문의 : 02-741-5363
 지로 납입 (지로번호: 7618848)
 농협 (011-01-404581 서준식)
 우체국 (010025-0189806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서준식)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면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27일 (토)

제 25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2.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3.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야
4. 갇힌 자들의 이야기 카메라로 담는다
5.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 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견제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알파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반민주의 실체를 목도하기도 했다. 남북교류와 협력도, 민주와 인권의 기치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로 잠입·탈출, 회합·통신한 혐의로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 후보위원이며,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로 친북·이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되었다. 검찰은 서열 23위라는 주장에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문제삼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이미 공인된 연구방법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반민주적 판결을 반복하는 재판부와 수없이 마주해야 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5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사법부 역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져 있다. '송 교수 무죄 석방'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 처음으로>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몸부림이 경찰의 방패에 처참하게 몸개졌다.

2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 김정하 씨 등 82명(비상대책위 발표)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2명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장애인 2명은 서울대병원과 강북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현장에 있었던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활동가는 "300여 명에 달하는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문화계 참석자들을 에워싸더니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경찰들은 심지어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1대가 부서지고 경찰의 육설과 참석자들의 비명이 난무했다. 추모제 현장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쇼한다'며 장애인들을 모욕했다"고 증언했다. 종로경찰서는 연행의 사유로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반을 들고있다. 하지만, 행사는 추모제로 지난해에도 평화적으로 치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은 최근 촛불집회와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등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로 해석된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은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 못지 않다. 추모제에 참가한 장애인 박동렬 씨는 "중구집 갔는데 (우리로 인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쫓긴 적이 있다. 또 커피숍에서 장애인이 씨빙을 하면 컵을 얼어놓고 나가버리는 손님이 있다"며 비장애인들의 편견에 찬 차별을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박덕근 씨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많이 접하면 이런 편견은 서서히 허물어질 것"이라며 "이런 편견은 장애인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성 장애인 박주희 씨는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차별 받고 억압받고 폭력에 노출된다"며 중첩된 차별의 고통을 토로했다.

문화제에 앞서 낮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선포결의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기획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제안하고,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기간으로 선포했다.

기획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1년 동안 장애인들을 억압하면서 단 하루 떡 주고 공언을 보여주는 기만적이고 시혜적인 장애인의 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는 "이 사회는 장애인이 방안에서 그냥 조용히 주는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대회가 끝나고 공동대표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이득권 교육권 보장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12가지 요구안을 국무총리실 윤중식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획단은 고 대행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농성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기사 처음으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탄핵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25일 '국민발의제·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윤성은 활동가는 "현 국면을 탄핵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혐소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의 원인을 한·민·자 3당의 폭거로만 한정짓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겼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효'에 갇혀있어서 안 된다"면서, "고삐 풀린 국회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소환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해 있는 정당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한정된 직접 민주주의의 조연이라면, 국민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발의제야말로 진정한 주연"이고, "따라서 국민발의제 없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대의제의 한계를 제한적으로만 보완하는 것일 뿐, 여전히 국민을 정치의 주변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2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펼칠 예정이다.

이미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4·15 총선 투표에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쓰인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 제안이 눈에 띈다. 용지는 사이트(www.democracy.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용지에는 발의해야 할 법이나 소환해야 할 의원 등 다양한 요구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또 오는 7일에는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국민발의제와 소환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간힌 자들의 이야기 카메라로 담는다

제8회 인권영화제 5월 21일부터 스크린 밝혀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8회 인권영화제가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올해도 제작지원으로 '인권'영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여정>을 만들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제작지원의 올해 주제는 '감옥의 인권'이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작지원작'을 공모했는데 주제에서 느껴지는 어려움 때문인지 공모로 들어온 작품들 중에선 지원작을 선정하기 힘들었다. 선정된 감독은 모두 3명. 먼저 2003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후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동참해 온 조석영 씨가 작품 제작에 합류했다. 인권영화제 측의 권유로 카메라를 들게 된 조 씨는 사회보호법의 희생자인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밀착, 카메라에 담게 된다.

2001년 전향 장기수의 소외된 삶을 다룬 단편 영화 <기억>의 감독 이맹유 씨도 이번 제작에 결합했다. 이 씨의 작품 방향은 '감옥의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짓눌린 인간의 존엄을 다룬 예정으로, 현재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중이며 이 작품은 극영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작지원 공모를 통해 만난 이동희 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만난 출소자 중 빈곤과 범죄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사연을 드라마로 만들 계획이다. '빈곤 범죄'의 문제를 성찰하게 될 이 작품은 극과 다큐멘터리를 혼합하는 방식이 될 듯.

현재까지 확정된 해외작품은 아직 채 10편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감옥과 관련된 영화로는 라트비아 다큐멘터리 노상 헤르츠 프란크의 <금지 구역 Restricted Area>이다. 라트비아의 한 소년원을 무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한 소년을 카메라가 쫓으면서 '소년원의 한계와 아픔'을 다루고 있다. 지난 1월 뮌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기업 The Cooperation>도 상영작의 목록에 있다. 자본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의 공통적 자기증식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작품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영상 텍스트로 읽히고 있다. 국내작은 지난 3월 15일부터 공모를 시작했고 31일 마감 된다.

<기사 처음으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둘째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었고 팔레스타인(의제항목 8)에 이어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던 인권위에 예상보다 일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22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셰이크 야흐메드 야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건은 미국정부의 대 중국 인권 결의안 제출 결정이다. 두 사건이 인권위의 전체 흐름과 다른 의제항목의 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대표단과 NGO 모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적암살로 비난받는 이스라엘

인권위 개막 직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민간단체에 의한 테러'였다면 야신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테러'라는 점에서 충격은 매우 컸다.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인권위는 24일 특별회의(special sitting)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다룬 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E/CN.4/2004/L.4)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미국과 호주는 반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은 기권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위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해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을 지지했던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입장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상 약화와 '고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중국인권 결의안 2년만에 제기

미국의 대 중국 결의안은 89년 천안문 사건 이래 인권위 '연례행사'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인권위 개막 직전 일부 정치범을 석방하고 개정된 중국 헌법에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있어 중국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했다. 일부에서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실망과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인권 결의안은 단순히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인권 또는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를 넘어서는 정치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중국은 '반미' 또는 '반서양'을 기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게 연대와 결속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중국인권에 대해 '부드러운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과거처럼 중국인권 결의안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조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NGO들은 여전히 열악한 중국의 인권현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감시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인권 결의안을 찬성하지만 순수한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패권적 힘 겨루기 형태로 변질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NGO는 유엔 안보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라크 침공과 이에 따른 무고한 민간인 학살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미국이 과연 그러한 결의안을 주도할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권위 초반에 유엔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나라들을 대변해 '나라별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항목 9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전체 국제인권 체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특히 국제 NGO들은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효과적인 인권개선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이 제도가 혐애한 국익 및 주권의 논리와 강대국의 패권적 힘겨루기로 축소 또는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결의안에 국제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여성폭력, 에이즈환자, 원주민 인권, 조국적기업 등 여전히 중요하지만 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관심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 북한인권 우회적 발언

한국정부는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9)에서 이번 회기 두 번째 공식 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북미의 인권상황을 개관하고 나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개처형, 노동교화소, 식량 자유 또는 구호를 위해 이웃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국제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고 작고 힘없는 나라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국과 북한 정부의 의제항목 9 발언문(영문)은 www.unchr.info 의 초기화면 우측 agenda item 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30일 (화)

제 25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2.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3.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춥불집회'를 붙은시 하는 그들
4. 주간인권호를(2004년 3월 22일 ~ 29일)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경찰이 3개월 전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불구속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지문을 채취하거나,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을 가져오는 등 지문채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난해 12월 조사 받았던 송과경찰서 안오섭 수사관으로부터 '조서 한 장에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출두요청을 받고 송과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문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고 있었고,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급,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것.

윤 씨의 다른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사무소로부터 지문이 입수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집행한 안 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지문은 동사무소나 다른 경찰서를 통해서 얻었다. 윤 씨에 대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어서 부득이 영장을 발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본인의 동의를 무시한 채 외부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은 절차 편의만 고려한 채 형사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풀려난 이후, 검찰은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사관은 "그 사건 이후 지문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대기시키고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지문을 채취하라는 검찰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강제되는데 압수수색검증영장이 규칙을 근거로 발부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지문이 요구되는 경우는 세가지다. 신원확인과정, 조서 확인, 수사자료표 작성이 그것. 그 중 신원확인과정은 신분증으로, 조서 확인은 서명으로 가능하지만 수사자료표는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 경찰이 지문을 고집하고 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제법의 방지 및 과거 범죄행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범죄기록표'이다. 하지만 '지문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윤씨는 "결국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 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찰 수사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명에 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석 기획단 집행위원 등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을 받았으며, 연행도중 부상당했던 장애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 후 27일 퇴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촛불시위 등 종로경찰서 관할의 다른 집회들은 이후에 책임자들을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찰의 자의적인 범집행을 비판했다. 26일 연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갔으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2박 3일 있어야 한다'고 협박하여 지문을 받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사에서 목비린 행사의 번거로움을 근거로 하여 안면의 사진을 찍는 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표했다. 기획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해 주겠다"며 공식적인 발언을 회피했다. 기획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6일 이후 계속 농성을 진행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야당의원들은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들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수십 만 명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마찰이나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 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 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겼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중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현재 결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 결정 후 국회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하기 어렵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갖가지 구실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고, 야간 옥외 집회도 여전히 제한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0년 전 이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같은 정치적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촉시켜서는 안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시각은 헌법재판소와 정반대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혼란'과 '위법'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실과 칼럼을 통해 촛불집회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단속을 촉구했다.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고 옹호했다. 국민일보 사실은 촛불집회가 "혼란의 악순환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신문은 "또 다른 분란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신들은 지극히 사소한 불편마저도 언론자유를 침해라고 반발하는 한국언론,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기본권을 포기하고 악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논조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 언론이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호순님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 '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 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 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서울 26개 구 순례하며 6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 "청년실업에도 성차별이" 대졸 여성 취업난 심각... 통계청, 2월 대졸 여성 실업률 남성의 2배 육박 발표(3.22)/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선포결의대회 진행...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 진행...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3.26)/ 박일수 열사 대책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영·호남 노동자대회' 울산에서 개최(3.27)

3. 누가 테러를 일삼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야신 암살/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일제히 이스라엘 비난하고 나서(3.22)/ 유엔 인권위원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미국 등 반대3개국, 한국 등 기권 14개국(3.24)/ 국내 17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촉구(3.2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31일 (수)

제 25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2.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즐자'가 필요하다!
3. 타워벨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4. <반대 차별 포럼> 첫 번째 주제 : 교육과 차별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따라서 이날 선고재판에서도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의대표부 소속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 디스켓'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송 교수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송 교수가 "경제인으로 포장"하고 저술활동을 벌여 국내 독자들에게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주체사상'에 영향을 주고 '북한 바로 알기'운동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밖에 '반국가단체가입·탈출, 회합·통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송 교수가 통일학술회의를 준비하며 방북 교류한 행위에 한해서 '지도적 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남북학술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상당히 기여한 활동으로 지도적 임무가 아니라고 보면서,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로 보고 있다"며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황장엽 본인이 국내에서 쓴 책에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빠져 있고 김경필의 디스켓에서 언급된 송 교수 지위 역시, (지도적 임무를 띠)포섭하는 주체가 아니라 포섭대상이었다"며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했다. 게다가 재판부 스스로가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로 선임되었다"고 하는 하나 북한 내에서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송 교수의 구속 이후 무죄 석방을 촉구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국내외의 많은 진보지식인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의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남북 화해의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욱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수긍하면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즐자'가 필요하다!

"아아아~ 뒤꿈치 내려." "허리 뒤에 붙이고 똑바로 앉아." "숨 쉬어, 숨!"

매년 4월에서 6월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신체검사가 있는 날, 아이들은 '땅콩', '숫다리', '똥똥보'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피를 다 동원한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가슴둘레가 적게 나오게 하려고 어깨를 움츠렸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치수를 키우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졌을까,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날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몸무게에 민감해서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심지어 전날 설사약까지 먹고 거의 탈진상태로 등교하기도 한다. 아예 학교에 안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키에 민감하다. 사촌동생 준호는 친구들이 아무리 '땅콩'이라 놀려도 165cm는 넘는다고 우겼었는데 신체검사 날 실제 키가 들롱나는 바람에 망신을 산 경험이 있다고 한다. 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나 싶지만, 지금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언론이 '몸짱 신드롬'까지 제조해내고 있는 현실에서 키, 몸무게와 같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친구들 앞에 까발려지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아이에게는 특정한 병력이나 질병만큼이나 체격에 관한 정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보건법이나 교육부령으로 마련된 '학교신체검사규칙' 어디에도 학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인적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 두지 않고 있다. 물론 문제의 몸뚱은 규격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회, 업무와의 특별한 연관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용모 단정', '남 171cm 이상, 여 159cm 이상' 등의 신체조건을 함부로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인격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출몰이 늘어선 강당이나 교실에서 교사가 측정 결과를 부르듯 한 학생이 받아 적는 절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어서 안된다. 이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입시교육체제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함부로 공개하는 학교나 교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클래식>이나 <내 마음의 풍금>과 같은 영화를 보면 교사가 반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한 아이를 불러 회중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이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없어졌지만, 아이들의 체격이나 건강에 관련한 정보가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여전하다. 지난해 베이스 반대 투쟁은 이미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국내 최고 부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극한 장애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주최측은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알리기 위해 부의 상징인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 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가구의 1/4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높은 전월세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상 주거급여는 3만2천원~5만4천원 정도에 불과해 월세 13만원~27만원 수준의 '족방'에도 미치지 못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취약성이 사회복지예산의 빈약함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 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빈곤사회연대 결성을 통해 그동안 부분별로 분산되었던 힘을 결집해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함께 준비해나갈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등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매달 집회를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반反 차별 포럼> 첫 번째 주제 : 교육과 차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반反 차별 포럼"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부주제 : 성소수자와 교육, 장애인과 교육,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육, 빈곤가정과 교육

연제 : 2004년 4월 1일 오후 5시 30분

어디서 : 노동사목회관

오시는 길 : <http://www.nodongsamok.or.kr/intro/map.asp>

회비 : 3000원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다름으로남은여성연대 02-441-2392,

한국동성애자연합 02-703-3542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